

학대부모 출소 정보 공유...민법 고쳐 '자녀체벌' 금지

아동학대 방지위해 법령 개정...학대아동 정보 등 학교·지자체 등에 공유 학대피해 조사할 경우 부모와 즉시분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배치

정부가 부모에 의한 아동·청소년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대폭 손본다. 가해자 부모 출소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공유하는 등 관계법령에 개인정보 특례 규정을 만든다. 62년간 유지돼 오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 민법 규정도 개정을 내달 본격 추진한다.

유엔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76%는 부모...학대 정보 폭넓게 공유

정부는 그간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사건이 발생한 후 대처해 왔다. 앞으로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의 사적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까지 집계한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

는 부모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학대를 다시 저지른 아동 재학대 가해자 중 94%가 부모였다.

법을 고쳐서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정보를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에 공유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사회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과 근거를 만든다.

정보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이 주관하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활용한다.

◇민법 징계권 개정 내달 추진... '체벌=훈육' 인식 개선

정부는 가정에 개입하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부모 훈육을 방제한 체벌이 아동 학대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민법 제915조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 뒤 8월부터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2년만에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은 다른 분야에서도 추진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일시분리조치'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신설한다. 복지부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당초에는 2022년까지 전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까지 1년 앞당겨 배치한다. 올해 10월 신규채용 일정이 지연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의 사전 전환배치를 추진한다.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부여도 검토한다.

아동학대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신고된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8월부터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는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한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에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처벌강화 특별TF(태스크포스)도

◇민법 징계권 개정 내달 추진... '체벌=훈육' 인식 개선

법무부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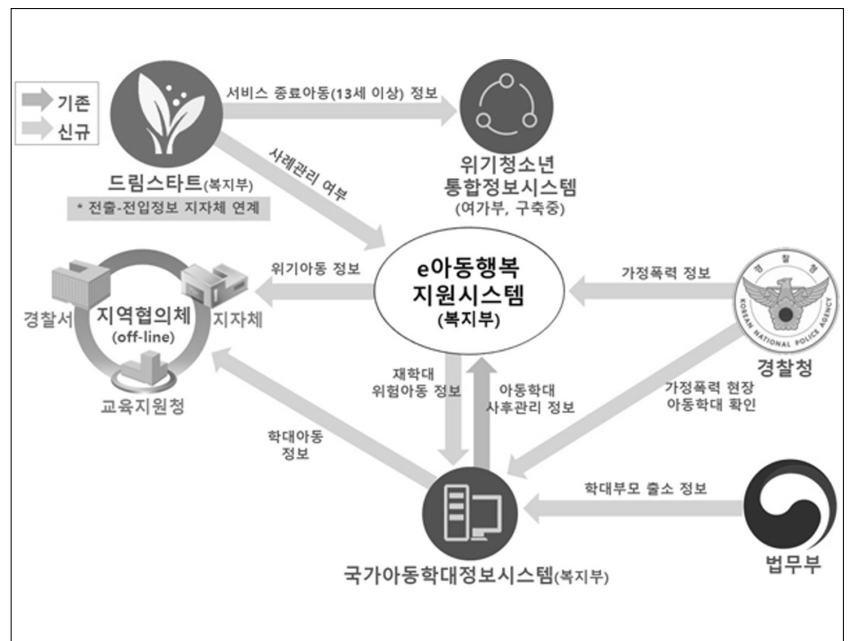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민법 제915조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 뒤 8월부터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2년만에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은 다른 분야에서도 추진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일시분리조치'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신설한다. 복지부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당초에는 2022년까지 전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까지 1년 앞당겨 배치한다. 올해 10월 신규채용 일정이 지연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의 사전 전환배치를 추진한다.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부여도 검토한다.

아동학대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신고된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8월부터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는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한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에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처벌강화 특별TF(태스크포스)도



구성에 양형 강화를 논의한다. 취업제한 기간도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관 범위를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입양기관 장과 종사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예방, 발굴, 보호·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쉼터 입퇴소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자립지원수당'을 마련한다.

거점 아보전에는 심리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심리치료전문가를 배치하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가정 '학생상담법' 제정을 내달 중 추진한다. 아동학대 이후 아보전의 관리를 거

부하는 아동학대 행위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편성하고 최소 반기 1회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해 제도를 지속해 점검·보완한다.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주관 '아이스팩 적정 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시중 아이스팩 80%를 차지하는 미세플라스틱 고흡수성수지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오유나 기자



매물 사라진 부동산 매물 정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이 지나면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는 작년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주취행패·절도' 동네 무법자, 출소 5개월만에 또 구속

전과 78범·실형 12차례

동네에서 행패를 일삼고 절도 행각을 저지른 '전과 78범' 4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죄고랑을 찾았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49분께 동구 산수동 한 편의점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1400원을 결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편의점에 출동한 파출소 경관들은 실내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서 훔친 카드 소지 1명을 구입하는 용의자가 A(48)씨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다.

A씨는 지난해 28일 오후 12시 30분께 대인동 도롯가를 만취 상태로 배회하다 크고 작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를 들락거

렸기 때문이었다.

A씨가 자주 다니는 곳까지 파악하고 있던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신고 접수 3시간4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편의점에 들르기 직전, 문이 열린 주택에 몰래 들어가 1500원 어치 동전과 신용카드 2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올해 2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술에 취하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온갖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지난해 28일 오후 12시 30분께 대인동 도롯가를 만취 상태로 배회하다, 갓길 정차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차량 시동이 켜져 있어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달 3일 오후 3시40분께에는 지산동 모 식당에서 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밖에도 A씨가 현재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5건이 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78범인 A씨는 실형 전과만 12차례이며, 이 중 대부분은 절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가법상 절도·재물손괴·사기·연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또 관내 112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취재본부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